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2/9 통권 1557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선택한다

‘회사 유형별’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 창(외부감사)와 방패(내부회계)간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창의적 PA 업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어음의 회계처리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받으세요
- ‘회사 유형별’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권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p.14)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은퇴 후 단독개인사업과 친구들 간 공동사업의 실행방법별 세금차이〉

공동사업방법	세금계산 방법, 기타의 부담금 등
개인 단독사업	총매출-원가·비용 = 1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단계누진세율(6~45%) 적용(연단위 높은세금)
법인 단독사업	총매출 - 원가·비용 - 대표자 본인과 직원 급여(근로소득) =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율(2억까지 11%)
2인 공동사업	총매출 - 원가·비용 = 순이익 ÷ 2인 = 1인당 소득에 다단계누진세율 적용×2인(낮은세금)
가족공동사업	총매출 - 원가·비용 = 1인의 종합소득으로 봄(분산되어도 최대 지분비율 자의 1인소득으로 봄)
근로공동사업	총매출 - 원가·비용 - 1인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도 적용) = 나머지 1인의 종합소득누진세율(제일 낮은 세금)
출자공동사업	총매출 - 원가·비용 = 순이익 - 출자 1인배당 종합소득 = 주사업 1인 종합소득
다수공동사업	총매출 - 원가·비용 = 순이익 ÷ 사업자수 = 1인당 종합소득×세율×다수
명의공동사업	총매출 - 원가·비용 = 실질 1인의 종합소득×세율(분산명의자는 불인정)
공동사업 필수	① 출자비율·역할을 명시한 동업계약서 ② 총거래액의 단일사업자 기장, 신고의무 ③ 근로소득공제 등의 절세목적을 위해 일부 공동사업자를 동일소득의 급여 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57호 / 주간 6호

2022. 2. 9. (수)

· 발 행 인 : 이 윤 언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은퇴 후 단독개인사업과 친구들 간 공동사업의 실행방법별 세금차이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창(외부감사)과 방패(내부회계)간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창의적 PA 업무	2
C E O 에 세 이	CEO는 선택한다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제외 가능 여부 - 양도담보부채무변제 - 위탁판매수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서류 - 해외고객사에서 소정의 물류비 지원시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어음의 회계처리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변경 - '1주택 공시가 9억 초과' 월세 수입 과세요건(주택수 기준)	10 11
직 장 인 Survival	슬럼프 극복하기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서면법령법안-5079, 2021.07.26) -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 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 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052, 2021.06.29)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권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함	13
세 무 정 보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받으세요	16 34
회 계 정 보	-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40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창(외부감사)과 방패(내부회계)간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창의적 PA 업무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업무분야	구체적 실행업무, 과정 · 절차, 업무방법과 산출물 등
창업자문	자금조달 안내 · 자문, 투자은행 등 섭외, 사업계획, 재무계획서 작성, 창업 지분구조 설계, 여러 단계별 자금조달 자문과 균형적 투자배분비율 산정 컨설팅, 청년창업지원, 중소기업설립자문
회계자문	외부감사에 대응되는 모든 내부회계지원(회계처리, 경리분개, 분 · 반기 · 연간 재무제표 작성, 특히 현금흐름표와 주식사항 작성, 연결재무제표 작성, 해외모기업과 통합회계분개), 외부감사 수감 현장대응지원
조세자문	국내외 세무자문, 세무조정, 세무대리, 이전가격, M&A세무, 세무진단, 조세불복
재무자문	자금관리, 자산 · 부채관리(ALM), 재무제표 구성항목의 균형화, 유 · 무상증자 · 재투자와 배당전략
내부회계	내부통제 · 회계관리제도와 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 구성, 기존 시스템의 개선 전환설계, 내부회계설계 후 시스템 S/W, H/W 도입의 최적정착자문
IFRS	상장, 코스닥, 비상장 대기업 등의 IFRS 자문, 일반회계기준과 IFRS간의 전환적용
가치평가	기업 전체(DCF, 상증법 등), 특정사업부문 특정자산부채, CB, 영업권 평가, 재무실사, 부실채권자문

기업매매	Deal business advisory, 기업인수합병 M&A자문, 구조조정, 회생, 파산, 부동산 취득 · 개발 · 분양타당성, 자산처분 · 매도 · 매수 등 각종거래자문과 타당성 평가, 기업지분 · 경영권 주식의 투자 · 매도거래자문, 사업타당성분석
경영컨설팅	재무경영지원, 기업업무흐름, 공정개선, 전사적 자원관리(ERP), 국제거래자문 등
위험자문	기업부정예방 · 실사(포렌직 서비스), 기업정보보안, IT컨설팅, 내부감사 등
기타자문	인사 · 조직지원, 보험충당금계산, 민 · 형사소송자문, 자금조달 · 투자알선, 경영진의사결정
ESG 자문	기후변화 협약대응의 기업내부의사결정 구조, 원부자재구입, 생산설비 개선변화, 친환경 제품전략, 사회적응 · 기여 활동(제품, 사회봉사 등), 기업운영구조 governance 최적화, 탄소통제인증업무 등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21일 (금)	1월 24일 (월)	1월 25일 (화)	1월 26일 (수)	1월 27일 (목)	1월 28일 (금)	2월 3일 (목)
미 달 러 (USD)	1190.40	1193.60	1194.20	1197.80	1197.00	1202.40	1205.70
일 본 엔 (JPY)	1044.16	1049.36	1047.50	1051.62	1043.36	1042.80	1053.75
캐 나 다 달 러 (CAD)	951.79	949.07	945.30	948.79	945.50	944.10	951.36
홍 콩 달 러 (HKD)	152.88	153.28	153.37	153.85	153.71	154.35	154.66
위 안 화 (CNH)	187.65	188.04	188.43	189.10	189.12	189.34	189.59
유 로 화 (EUR)	1346.76	1353.54	1352.67	1353.87	1345.55	1340.07	1362.98
호 주 달 러 (AUD)	859.77	856.95	853.55	857.21	852.26	846.43	859.91
싱 가 폴 달 러 (SGD)	883.64	887.60	887.45	890.92	888.02	888.79	895.2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21	285.11	285.08	285.87	285.58	286.46	288.07

CEO는 선택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가전제품의 광고카피가 있었다.

고객들에게 경쟁사 제품보다 우수한 자기제품을 사라는 다소 협박적이면서도 우회적이고 또 애교스런 명카피였다.

호소력이 있었기에 한때 사람 입에 널리 오르내리면서 사용됐다. 일테면 애인을 선택하는데 애용됐고 심지어 식사메뉴 고르는데도 농담조로 쓰였다.

하긴 삶 자체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대부분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선택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고뇌하며 선택한다. 그 선택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경영 역시 선택이다. 그 선택이란 경영행위의 정점에 CEO가 자리 잡고 있다. 선택이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의사결정이다. 결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없다. 자원과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버릴 것과 택할 것을 강요받으며 결정하는 엄숙한 행위다. IBM은 복사기를 재빨리 포기하고 제록스는 애시당초 컴퓨터를 포기했어야 했다. 아메리칸 모터스는 승용차를 포기하고 지프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야 했다.

한국의 경우, 오너의 취미 때문인지 아집 때문인지 자동차 사업에 뛰어 든 재벌들의 ‘잡화상식’선택은 뼈아프게 반성되어야 한다. 국민의 짐만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EO는 처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강조해서 말하면 CEO는 ‘선택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CEO는 무엇보다 기업의 갈 길을 선택한다.

걱정파 경영철학의 대명사인 인텔의 앤디 그로브 회장의 선택은 훌륭했다. 80년대 중반 인텔은 커다란 비즈니스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일본의 메모리칩 생산능력이 막강해 졌다. 따라서 메모리 칩 생산을 과감히 포기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부문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꿨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은 컴퓨터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다른 회사들에게도 전략적 전환점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CEO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전략적인 전환점의 속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회사를 보호하는 일이다.”라고 앤디 그로브는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텔사의 제품을 컴퓨터 산업의 표준으로 만들어가면서 세계기업으로 부상시켰다.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 회장 역시 선택의 심각성을 신입사원들에게도 강조하곤 했다. 소니를 선택하였으므로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장래와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선택은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한때 중성자탄이라고 불리던 GE의 잭 웰치도 사업 부문별로 1,2등이 아니면 과감히 버리면서 성공해 왔다. “의사결정은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CEO 스티브 파파스의 말도 흥미할 만하다. 그래서 CEO는 24시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학습하고 사람과 만나고 행동해야 한다. 경영컨설턴트 데브라 벤튼의 지적처럼 선택의 형식적 시간은 업무의 5%미만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선택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CEO는 사람을 선택한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을 때 삼고초려를 통하여 애쓰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더불어 CEO는 물자를 선택하고 때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모든 선택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과 주주 그리고 사회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기도취나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상당수 2세, 3세대처럼 햄릿처럼 우유부단하거나 돈키호테처럼 경망스러운 것도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프로CEO의 선택은 재빠르며 단순명쾌하고 힘이 있고 스마트하다.(Speedy, Simple, Strong, Smart)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제외 가능 여부

- Q**
1. 당사 프로젝트 관련 하도사(A사)와의 준공합의 시 A사의 추가 비용청구로 인해 합의가 불가함
 2. 지속된 준공합의 불가로 지불이 지연됨에 따라 당사는 제시 금액 중 공급가액분을 지연 이자와 함께 공탁(21.10.14) 및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A사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과 지연이자만을 공탁)
 3. 21.11.1일 A사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당사 제시금액) 승인 후, A사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와의 합의 없이 21.11.2일 임의로 발행함 (21.10.14)
 4. 당사는 당사가 제시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와 부가세에 대한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를 A 사 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A사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함(21.11.12)

당사는 현재 A사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해당 준공금에 대해 A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21년도 2기확정 시 A사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추가요청금액분)를 매입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시에 매입세액 공제 시 제외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공급가액의 다툼에 따라 이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시 제외가능한지의 여부는 귀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귀사가 신고반영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스스로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담보부채무변제

- Q**
- 당사는 법인이고 채권자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한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자A의 양도담보물을 양도담보부채무변제 계약공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자산, 부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양도담보된 기계장치의 경우 취득년도가 2000년대로 표시되는데 내용연수 문의(기계장치 10년 정액 또는 경제적 실질반영 등)
2. 양도담보부채무로 소유권 이전한 기계장치 계정문의(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하게 기계장치로 처리)
3. 미변제 채무와 양도자산의 변제 회계처리 문의(양도자산 채무/미변제 채무 변제 처리가 맞는지)
4. 혹시 위 사례의 경우 별도로 추가될 회계처리가 있는지

A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라 양도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온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신규자산과 동일하게 기계장치로 처리하면 되며, 내용연수는 중고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중고자산도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이나 중고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수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서류

Q 위탁판매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근거서류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위탁판매수출이 대행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나 영세율매출명세서가 영세율매출 입증서류가 됩니다.

해외고객사에서 소정의 물류비 지원시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Q 해외 고객사에서 세계유가 급등에 따른 보상으로 소정의 항공운임비를 입금을 해줬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성 금액이 아닌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유류대 인상에 따른 항공운임비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음의 회계처리

상담실 백종훈 차장

어음이란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장소 및 날짜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한 유가증권으로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발행자가 수취인에게 약정한 기일과 장소에서 일정금액을 지급기로 약속한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어음이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어음 자체가 대금의 결제에 대한 보증력이 강하면서도 결제일 이전에도 할인 또는 배서양도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의 회계처리

어음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음거래의 결과로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것인지 또는 원자재나 상품 등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어음의 계정 및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되므로 어음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통상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는 ‘받을어음’(또는 매출채권)계정의 차변에 기재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는 ‘지급어음’(또는 매입채무)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 제품을 납품하고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차)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10,000	대)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원자재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차) 원자재	100,000	대) 지급어음(또는 매입채무)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시의 회계처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배서라고 한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만기일전에 상품매입대금이나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바,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받을어음(또는 매출채권)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한다.

❖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현금	100,000	대)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00,000
-------	---------	-------------------	---------

또한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만기일 전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즉, 어음할인이란 어음의 만기금액을 할인받은 시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할인으로 인하여 수취할 금액은 어음의 만기금액에서 할인받은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어음할인에 따른 차감되는 할인료는 그 성격이 어음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 등에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라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통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개념보다는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 어음할인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	99,000	대) 받을 어음(또는 매출채권)	1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양도차익	양도차익*× $\frac{(\text{양도가액}-9\text{억원})}{\text{양도가액}}$	양도차익× $\frac{(\text{양도가액}-12\text{억원})}{\text{양도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특공제액× $\frac{(\text{양도가액}-9\text{억원})}{\text{양도가액}}$	장특공제액× $\frac{(\text{양도가액}-12\text{억원})}{\text{양도가액}}$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적용시기) 2021. 12. 8.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22년 자동차 관련 세제혜택 주요 내용

개소세 30% 인하 혜택	6개월 연장(~2022. 6)
친환경차 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3년 연장(~2024. 12.)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1년 연장(~2022. 12.)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50만원 → 75만원(~2024. 12.)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2년 연장(~2023. 12.)
자동차세 연납 혜택	1월 연납시 연간 세액의 9.15% 공제(3.6.9월에도 신청 가능)



‘1주택 공시가 9억 초과’ 월세 수입 과세요건(주택수 기준)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 전세금
2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증금 · 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해당 보증금 ·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



투자대상별 투자수익 과세 제도

구분	국내주식	가상자산	해외주식
공제금액	5000만원	250만원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지방세 별도)	20% (지방세 별도)	
과세시기	2023년 이후		과세 중
비고	공제금액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여야 대선 후보 공제금액 상향 공약	



슬럼프 극복하기

1. 멈추어라

제일 처음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멈추어서 먼저 그 고리를 끊고 자신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자. 긴장을 풀고, 휴식을 갖고, 재미있는 일을 찾자.

2.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 심리적 압박감을 떨쳐내자. 그것들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3. 자신을 판단하지 말자

부정적인 사고를 씻어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내 삶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부분에 대해 생각을 집중하고, 그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 새로운 지식을 통해 시각을 넓히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친절하자.

4. 경쟁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응하기보단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자.

5. 긍정적인 대화로 삶을 채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담을 나누는 것을 즐기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러한 실패담을 지나치지 않고 끄집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대화와 생각으로 긍정적 잠재의식을 만들자.

6. 의사결정을 신중히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자. 슬럼프 동안의 판단력은 오히려 흐려지기 때문이다.

7. 자신감을 회복하자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만나자. 슬기롭게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매 순간, 1년 365일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상황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몸과 마음의 리듬을 재정비하도록 하자.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서면법령법인-5079, 2021.07.26

■ 질 의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 취득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 (갑설)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을 적용
(을설) 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자산 건설 각각의 작업진행률을 적용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권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경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00, 2021.07.09

■ 질 의

- 신청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여, PFV가 PP도 YY군 소재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등기 분양이며, 이하 "본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21.0.00. 본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이자 휴양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AA(이하 "매도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 '21.0월 중 PFV가 설립되면 매도인과 PFV간 매매계약을 체결(토지 000억원, 사업권 000억원)할 예정입니다

-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질의함
- 매도인은 '18년부터 본건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설계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 계약상 신청법인의 계약금 지급의무는 본건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고시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잔금은 건축인가가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 매도인과 제3자간 체결된 용역계약(설계, 인허가, 홍보 등)이 신청법인에 이전됨

질의내용

-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사업부지와 별도로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회 신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기존에 해당 사업을 위해 보유 토지의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업무, 관련 용역계약 체결 등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토지의 취득·조성과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또한 콘도미니엄의 신축·분양사업이 토지와 건물의 공급으로서 과면세 겸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052, 2021.06.29

질 의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18.10.18.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을 AAA(주)(이하 "양수인")에 일괄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양수인이 건물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서상 건물 공급가액을 '0'으로 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 공급가액(000억원)으로 약정함
- 매매계약 및 확약서에 따르면 양수인이 건축물 철거신고를 신속히 진행하고 잔금일 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양수인은 잔금일 전에 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양도일('19.2.28.)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며 '19.5.30. 철거가 완료됨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잔금 지급일 전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 중인 경우 개정된 부가법 § 29 ⑨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연기업 수 또한 185개로 나타나 2011년 11개와 비교했을 때 큰 성장세를 보였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상생 의지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

김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간 상생협력활동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았으나, 이를 수용해 불필요한 재무정보는 제외하고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인력개

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에 나섰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정부의 신성장 기술 등 첨단분야 육성에 따라 혜택이 대폭 늘어난 세액공제다.

사업에 따라 공제금이 억단위에 달할 수 있으나, 증빙을 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자칫 잘못 공제가 나갈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려면 기금적 2월에 미리 신청해야 심사결과를 조기 통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며느리·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앞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부터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제도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주어지지만,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3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 가족이 같은 세대 내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상속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재부는 "법령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 발간

- 기획재정부, 2022. 1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 단독: 20→22백만원, 홑벌이: 30→32백만원, 맞벌이: 36→38백만원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
-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 22.2.11.~)
-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22.3월~)
 - *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보건·복지·고용〉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22.4월~)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 *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관광〉

-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2.2.3.~)
 - *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환경·기상〉

-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2.4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 22.2.5.~)
-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 22.1.28.~)
- * (전기차충전) 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국토·교통>

-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농림·수산·식품>

-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 22.4.15.~)
-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희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국방·병무>

-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 * (병장)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552,100원, (이병)510,000원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 분('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행정·안전·질서>

-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2.1.13.~)

-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 ('22.4.20.~)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 12월 31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합니다.

- 연구개발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상향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① 연구개발 비용(%)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②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대상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합니다.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 50만원 미만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인정사유 준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부도 또는 도산 우려 ③ 납세자,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사망 등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세액공제 요건이 단순화되고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증진	개정		
요건	다음 ❶과 ❷ 모두 충족❶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❷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2%	15일 이내 지급	0.5%
	16~60일 지급	0.1%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등이 추가될 예정(시행령 개정)입니다.

■ 현행 공제대상 기술을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 (적용대상 특구)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사후관리 규정)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외 지역으로



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세액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요건이 단순화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성과급 요건)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 * (종전)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한해 적용 → (개정)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
 - (중소기업 공제율) 10% → 15%로 상향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고, 요건이 정비됩니다.

■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후 관리규정이 보완됩니다.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사후관리규정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됩니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규모와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복귀 기한요건이 완화됩니다.



■ 국내복귀 요건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의 경우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을 변경합니다.

■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경감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었으나, 해당 경감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 23.12.31.)하였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현행) 3,000만원 이하 → (개정)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 (현행) 2,000만원 이하 → (개정) 2,600만원 이하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 · 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구분	제출내용	구분	제출내용
취득 시	취득내역	취득 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 시	처분내역	처분 시	처분내역
<추 가>		보유 시	보유내역

※ 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1억원 한도)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부과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합니다.

■ 공제 대상자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 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공제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합니다.

■ (현행) 15억원까지 공제 허용

■ (개정) 20억원까지 공제 허용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현행)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개정)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B2B) 포함

- 간편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 서식은 '22년1분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2022년부터는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후 수출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

- 종래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등 필요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2022년 1월 1일부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없이(외국물품인 경우) 바로 선박에 적재하여 사용·소비가 가능합니다.

- * (선박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어로용품) 어구(漁具), 조상기, 오타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은 바로 선박에 적재를 하지 못하고 수출입통관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통관질서 성격의 관세법상 의무(일시양륙·환적 신고의무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규정(관세법 제223조의2) 위반 시에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수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작성이 간편한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 원산지간이확인품목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서와 감면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이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었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예시: 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협정에 근거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과도 협의하여 적용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포털사이트(www.customs.go.kr)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재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 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국유일반재산의 각종 신청 및 결과확인을 현장사무실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부·변상금·매각 관련 신청, 단계별 처리이력 및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유일반재산 온라인 서비스 : <https://gpminwon.kamco.or.kr>

- 신청자의 업무담당자, 검토기한 등의 정보 및 계약내역납부/납부예정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고객의 단순 문의요청 업무에 업무시간 외에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통해 대기없이 기본 안내를 제공합니다.

-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는 2022년 1월 3일부터 개시됩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업무 특성·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과 다른 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범특례사업 종료 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입찰공고되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시 안전평가가 강화됩니다.

-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심사기준인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200억원 이상 기술공사)의 안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現) 가점 → (改) 가감점으로 전환*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 * 그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모든 업체에 가감점 부여로 개선
- 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항목을 종합심사 낙찰제 안전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

-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국세청(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됩니다.

*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법인세법 제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구,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지정기간 만료전 공공기관(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④ 별표 6의7)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됩니다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 ·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제출대상 사업자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됩니다.

-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받으세요

- 기획재정부, 2022. 1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 사전심사 신청건수: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❶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❷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
 -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큰 반면,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개,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계	30,353	22,998	34,122	22,305	37,525	26,430
일반	1,519	10,813	1,453	9,658	1,526	13,413
중소	28,834	12,185	32,669	12,647	35,999	13,017

* 출처 : 국세통계연보

2

납세자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신청대상 비용)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세청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 (심사 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술검토)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비용검토) 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제대상 금액인지 여부

- (심사 관할) 연구·인력개발비의 종류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심사 담당 관할을 구분하여 심사를 합니다.

- 기술검토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국세청이 각각 담당하고, 비용검토는 국세청이 모두 담당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비교 〉

구 분	정 의	세정지원	검토 기관	
			기술검토	비용검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당기에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세청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별표7의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당기에 지출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50% 세액공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세청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 ① 당기 지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 대 25% · ②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인력개발 비의 최대 50% → ①, 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	---------------------------------	--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

-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담팀에서,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심사 청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청서류 정비) 신청서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사전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 그 동안 사전심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누리집 보완) 2020.1.1.부터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①연구노트 작성사례와 그 동안 수행한 사전심사를 토대로 ②세액공제 인정·불인정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 5년간 보관해야 함(조특령 §9⑩)

□ (기술심사 인력 증원)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를 위해 산업분야별 기술심사 전문인력을 증원(4명)*합니다.

* 디자인·콘텐츠, 에너지 및 유체공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채용절차 진행 중

5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단,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①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

②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6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가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통해 건실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지원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204-3923~9)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 국세청, 2022. 1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하고
 -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

1 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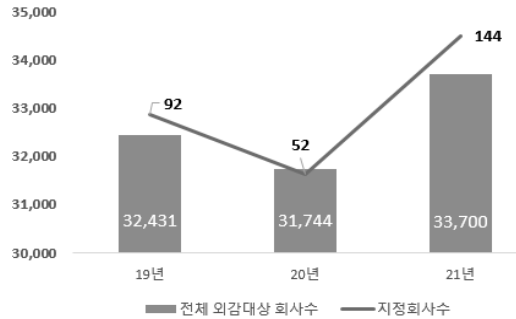
- 新외부감사법이 시행(' 18.11월)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
 -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함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구분	'19년	'20년	'21.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32,431	31,744	33,700
지정회사수 (선임기한·절차위반)	92	52	144

〈선임제도 위반 감사인 지정 현황〉



2 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선임제도)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 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 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대형비상장주식 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	
③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④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주요 위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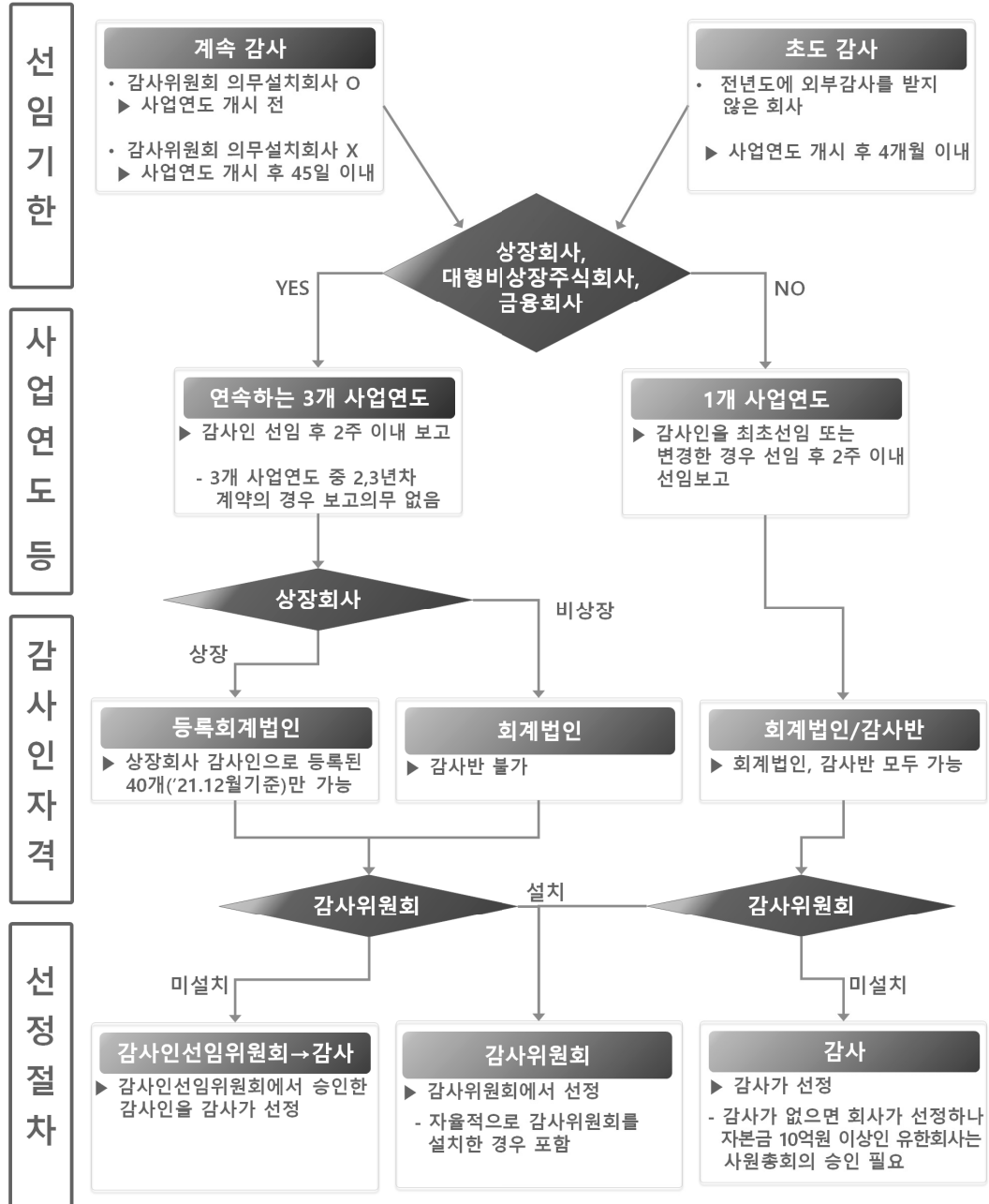
- ① (선임기한 위반) '19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법인)는 '19년 말 자산총액이 800억원 이하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되었고, '20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20.4.29. 체결함
- '20년 말 자산총액이 1,050억원이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된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21사업연도 계속감사계약을 '21.4.30. 체결함
 - ➡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21.2.14.) 위반
- ② (선정절차 위반) '19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동 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B사는 '20년 말 자산총액이 1,100억원이 되어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었으나 B사의 회계담당자는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정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 종전과 동일하게 동 사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1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 감사인 선정절차* 위반
-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함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22.1월)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지속적으로 실시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붙임 1 -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붙임 2 -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 §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1.12.31.) 감사인 선임
-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 · 별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

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1.12.31.) 감사인 선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3 비상장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 22.4.30.까지 선임

-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4 유한회사

-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 22.4.30.까지 선임
 -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 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 동의시(5~6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 2. 선임보고 방법 안내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 를 클릭
-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항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전산화교육자료” 및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설명회” 자료를 참고
-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항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항 정보를 다시 확인
-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